

## 한전공대 입지 오늘 발표 출혈경쟁에 후유증 걱정

광주·전남 2000억 넘게 지원 약속... '승자 없는 게임' 벌여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하기로 한 한전공대 최종 입지가 28일 발표됨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광주·전남의 유치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입지 선정 이후 발생할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부지 제공 및 기반 조성 그리고 설립 및 운영 지원비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비용을 빛가람혁신도시 공동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가 제안한 지원 규모는 2000억원을 넘는다는 소문이 무성할 만큼 상생을 다짐한 광주와 전남이 '승자 없는 게임'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한전 역시 이 같은 광주·전남의 경쟁을 관망하면서 6곳의 후보지 중 2곳을 압축해 실시한 2단계 심사 기준을 부지 제공 조건, 설립·운영 지원 등으로만 구성해 이 같은 경쟁 구도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전공대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는 향후 막대한 재정지원금에 허리가 휘 수밖에 없고, 유치가 실패한 지자체는 '지역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

다는 점에서 지역 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에서는 '한전의 미래 인력을 충당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한전공대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이 입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이 한전공대 입지를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면, 경쟁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물론 지자체 부담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치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지역전문가는 "한전공대 설립이 2017년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 포함된 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거쳐 후보들이 앞다퉈 유치를 다짐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여기에 민선 7기 출범 이후 광주와 전남의 상생에 균열이 생기고, 빛가람혁신도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견잡을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월 4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한전의 입지 선정을 받아들이고, 입지 발표 이후에도 변함없이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한전공대 후보

지 경쟁을 통해 '지역을 우선시하는' 광주·전남의 속내가 양측에 확인된만큼 혁신도시 시즌 2, 군공항 이전 등 상생 현안에서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표면적으로 상생을 다짐하지만, 민감한 현안이 돌출하면 '지역이기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치전을 계기로 광주·전남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전공대가 에너지 분야 세계 인재를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의 미래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광주·전남이 유치보다는 단기간 내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이 해야 할 역할을 구상하고, 한전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주풍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한전공대가 지역의 비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치 경쟁을 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며 "한전공대는 광주·전남에 자리할 뿐 세계를 지향하는 대학이며,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물론 울산과학기술대, 포항공대, KAIST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설 기다리는 과일 상자 설 명절을 앞두고 27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에 사과와 배 등의 과일이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총탄 자국까지 완벽 복원한다

조선대 연구원 용역 결과

서무과·지사실 등 재건축  
별관 3·4층 원래 모습으로

5·18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항쟁 당시 생겼던 총탄 자국까지 완벽하게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은 최근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옛 전남도청 1층 서무과와 2·3층 도지사실 등을 재건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제거해야 한다. 상황실, 경비실, 정문 기둥에 있었던 총탄 자국 등은 실시설계에 반영해 원래 모습

그대로 재현할 방침이다.

문화전당 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혈어 배린 도청 별관 일부 건물도 원래 모습대로 복관과 이어진다. 다만 1·2층은 전당 입구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복원 작업은 3·4층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과정 중 옛 전남도청 7층과 옛 전남경찰청 외부에서 총탄 추정 흔적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오는 29일 '옛 전남도청 복원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8월 아시아문화원에서 발주한 옛 전남도청 등 6개 동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 복원 실무 전담팀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설계용역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눈물 짓은 할머니의 탈신 한 짝  
-보성서 손녀 기다리다 교통사고 ▶6면  
KIA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선수단 54명 참가 옥석 가리기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박상기 법무, 박근혜 사면 가능성에 "재판부터 끝나야"

"세월호집회 참가자 등

3·1절 특사대상 검토 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또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박 장관은 "통상 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 해왔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자료 검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관련 자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상 사면 결정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한다.

세월호 관련 집회 등 6개 시국 시위로 처벌받은 이들의 사면을 검토 대상으로 삼은

배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2월까지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해 이들이 3·1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박 장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남 구속된 것과 관련, "그래도 일국의 대법원장을 지내신 분"이라며 "성심성의껏 잘 보살피려고 (교정본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 때) 포승줄을 매거나 수갑을 차지 않았는데,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홍약범 등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포승줄이나 수갑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www.pcad.go.kr

## 자치분권 실현! 주민중심 제도로 만들어 갑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9. 발표)에 담긴 33개 과제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